

북한의 상업유통관리체계

황동언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머리말

이 반적으로 어떤 사회에서나 상업유통체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구조는 생산·유통·분배·소비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유통 즉, 상거래가 가격이라는 매개 변수에 의한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반해,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계획 원리에 입각하여 경제에 필요한 모든 재화와 용역이 국가 계획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상업유통체계 역시 사회주의적 계획에 부수적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의 상업 유통은 정부의 계획에 의해 생산된 재화 및 용역을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상업유통망을 통해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상업 유통의 의의와 역사적 흐름

북한 상업의 역할과 원칙

북한의 상업유통체계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상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199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3기 3차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총9장 96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사회주의 상업을 “인민들에 대한 공급 사업이며 그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상업의 주체는 국가로서,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상품 유통 사업을 조직하고 상품을 골고루 공급하여 주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시에 상업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연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사회주의 상업은 노동에 대한 사회주의적 분배를 실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1)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상)」, 「국제 문제」, 1996. 10, p. 130.

하고 있으며, 국가 재정 수입을 증가시켜 화폐 유통을 강화하는 데도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주의제도에서 국가 예산 수입은 주로 거래 수입금과 국영 기업 이익금의 형태로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 재정 수입은 상업망에서의 상품 실현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²⁾

사회주의 상업의 발전을 위해서 몇가지 원칙들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민적 상품공급제도인 注文制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도매 상업은 주문제에 기초하여 생산 기관으로부터 상품을 인수하여 소매 상업에 대한 공급을 보장하고, 소매 상업은 주민들의 상품 수요 특히, 노동자 지구에 식료품, 농촌 지역에 공산품 등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급해야 한다. 즉, 북한의 상품공급 체계에서는 상품 공급의 고리와 기업간의 계획적 연계가 중요한데, 이러한 연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요자의 주문에 의해 상품을 생산·공급하는 주문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상품의 원천을 조성한다. 셋째, 사

회주의 상업에서 봉사 혁명을 힘있게 벌인다. 넷째,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여 상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를 세운다. 다섯째, 상업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상품 유통 사업을 강화·발전시킨다. 여섯째, 조건이 성숙되는 대로 완전한 공급제로 이행한다. 일곱째, 우호적인 나라들과 상업 분야에서 다방면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³⁾

북한 상업유통제도의 흐름

북한의 상업유통제도는 상업 유통이 얼마나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에 따라 몇 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⁴⁾

첫번째 단계는 사회주의 상업 준비기(1945~56년)이다. 이 시기는 상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경제 영역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준비 조치들을 취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아직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개인적 상업이 상당수 남아 있었다. 1947년 9월부터 북한에서 독립적 수공업자와 가내 공업자, 그리고 기타 근로 인민의 노동력, 생산 수단 및 자금을 협동화하여 생산하는 협업 형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2) 전응렬(1983. 11), "북한의 상업(상)", 「북한」, p. 195.

3) 정재길(1992 가을), "새로 제정된 북한 사회주의상업법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 p. 191~192.

4) 단계 구분은 홍성국(1996), 「북한의 상업·유통」, 공보처의 경우를 따랐다.

(표 1) 소매 상품 유통의 경제 형태별 구성

(%)

	1946	1949	1953	1956	1957	1958
국영협동조합상업	3.5	56.5	67.5	87.3	87.9	99.9
- 국영상업	0.1	27.9	32.0	53.9	48.8	69.2
- 협동조합상업	3.4	28.6	35.5	33.4	39.1	30.7
사영상업	96.5	43.5	32.5	12.7	12.1	0.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조선중앙연감」(국내판)(1959), p. 335; 고승효(1993), 「북한 경제의 이해」, 평민사, p. 89에서 재인용.

들을 국가 경제 내로 흡수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가적 소유의 확립에는 미치지 않았다. 이후 1948년 8월 중요 산업 국유화 법령이 발표되었다.

두번째 단계는 사회주의 상업으로의 개조기(1957~60년)이다. 이 시기는 북한이 상업 부문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게 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전부터 존재하던 소규모 개인적 상업이 거의 소멸된다.

1956년 말부터 북한은 개인 소유의 상업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 사업' 및 '농촌 경리와 수공업의 협동화' 작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1958년 8월에는 사회주의 개조에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된 「내각 결정 제 140호」를 공포하여, 모든 개인적 상업 활동이 금지되고 사회주의적 경영을 기초로 한 유일한 상업유통제도로 변화하게 되었다.

세번째 단계는 사회주의 상업의 강화 발전기(1961~89년)이다. 이 시기에는 상업을 일원화된 계획체제로 확립·발전시켰다.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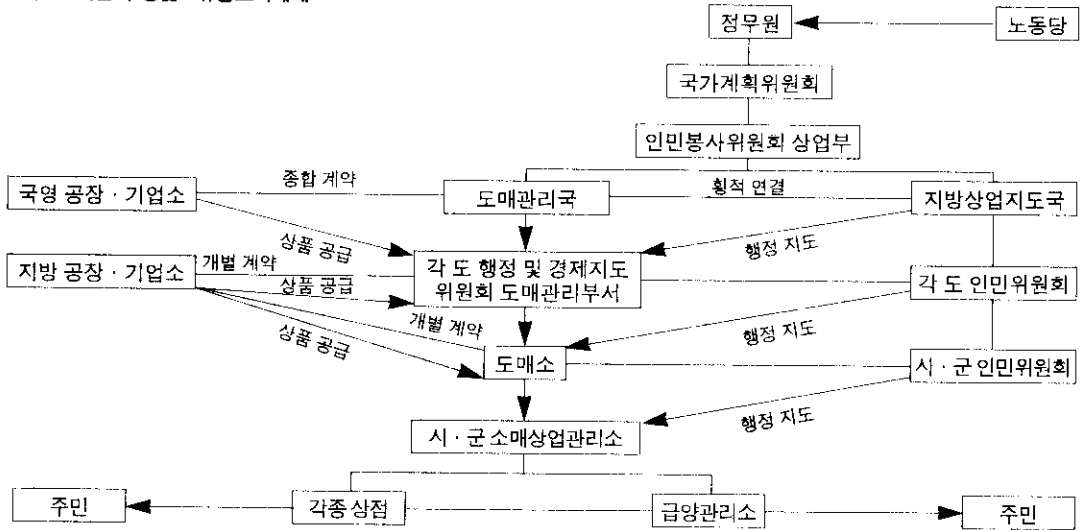
년대에 상품주문제를 강화하는 한편, 70년대에 들어서는 도매상업체계를 중앙 직속으로 단일화하여 주문제에 의한 통일적·계획적인 분배 및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소매 상업에 대한 관리는 시·군 단위로 단일화하여 상품 공급에 있어서 주문제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네번째 단계는 개인적 상업의 잠복적 생장기(1990~현재)로서, 기존의 상업유통체계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기반이 내재적으로 허물어지는 듯한 경향을 보이는 시기이다.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더불어 기존의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체제의 내적 모순이 현재화되면서부터 북한체제에도 어느 정도 변화의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상업유통관리체계

북한의 상업 유통 관리는 기본적으로 계획 하에 있다. 즉, 사업 분야에 대한 계획이

〈그림 1〉 북한의 상업·유통조직체계



자료: 북한연구소(1983), 『북한총람』, p. 656; 홍성국(1996), 『북한의 상업·유통』, 공보처, p. 45.

정무원 산하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입안되어 인민봉사위원회 산하의 상업부에 하달되는 것이다. 그 후 상업부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시를 받아 주민들의 상품 수급 상황을 파악한 다음, 산하의 도매관리국과 지방상업지도국 등을 통해 각 도 인민위원회 상업국, 도매관리부서 및 산하 기관을 직접 지도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상업 유통 관리는 기본적으로 국가계획위원회-인민봉사위원회 상업부-도매관리국-도매소-소매상업관리소라는 수직적 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상업지도국-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상업 부서가 상업유통체계를 행정 지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상업부의 도매관리국은 상업부의 직접적인 지도 통제 하에 산하 부서인 지구도매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통제·감독하기 위한 행정 기관이다. 이 도매관리국 산하에는 계획처, 부기처, 운수처, 교류처, 섬유처 및 식료처 등이 있다.

도매관리국 아래로 실제 상품 유통을 취급하고 있는 도매소, 소매소 등이 있다. 북한은 관리상 도매 상업과 소매 상업으로 분리하여 도매 상업은 중앙에서, 소매 상업은 지방에서 관리하게 하고 있다.

도매소는 상점·식당과 더불어 대기업의 주요한 형태이며, 생산과 소매를 연결시키는 중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도매상업소는 중앙에 중앙도매소, 각 도에 도도매소 및 2~

3 개 시 및 군의 상품 공급을 관할하는 지구도매소가 있다. 그밖에도 중요 상품별로 직물도매소, 신발도매소, 다과도매소, 육류도매소, 수산물도매소, 농산물도매소 등이 있다.

소매 상업 관련 기관·기업소는 북한 주민들에게 상품을 직접 공급하고 봉사하는 상업의 기본 단위이다. 규모에 따라 백화점, 종합 상점, 상점, 내점, 배대로, 취급 품종에 따라 전문 상점과 비전문 상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상업의 사업 형태

경제적 기능별 사업 형태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에서는 상업의 사업 형태를 생산물의 경제적 기능과 유통 조직 형식에 따라 크게 상품 공급, 구매, 사회

급양, 편익 봉사, 상품 보관 관리 등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상품 공급은 사회주의 상업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업이다. 상품 공급 사업은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기관의 지도 하에 도매 및 소매 상업 기관, 기업소가 수행하고 있다. 한편, 상품 공급은 주문제에 의한 공급이다.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는 주민들의 수요에 따른 상품주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계획기관은 상품주문서에 따라 상품 생산·분배·공급 계획을 작성하게 하고 있다.⁵⁾ 또한 일원화된 상품공급체계를 세우고 상품 공급 세부 계획에 기초하여 상품 공급 계약을 맺는다.⁶⁾

둘째, 구매 사업이다. 북한에서는 개인 부업 경리와 협동 경리가 존재하여 여기서 생산되는 생산물은 국유와는 다른 협동적·개

〈표 2〉 북한의 계약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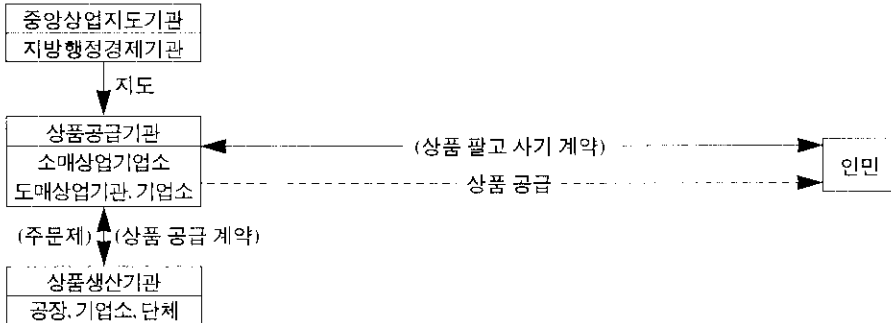
계획적 계약(5 가지)	일반 계약(12 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재 공급 계약 · 상품 공급 계약 · 농업 생산물 구매 계약 · 기본 건설 시공 계약 · 화물 수송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고 사기 계약 · 보관 계약 · 위탁 계약 · 저금 계약 · 위임 계약 · 은행 대부 계약 · 작업 봉사 계약 · 빌리기 계약 · 여객 운송 계약 · 보험계약 · 구기 계약 · 합동 작업 계약

자료: 정재길, 앞의 글, p. 193.

5) 「사회주의상업법」, 제2장 11조.

6) 북한 민법상 계약은 계획적 계약과 일반 계약으로 구분된다. 상품 공급 계약은 인민 경제 계획에서 기초하여 기관·기업소·단체들 상호간에 체결되는 계획적 계약의 형태이다(정재길, 앞의 글, p. 193).

(그림 2) 상품 공급 사업의 체계



자료: 정재길, 앞의 글, p.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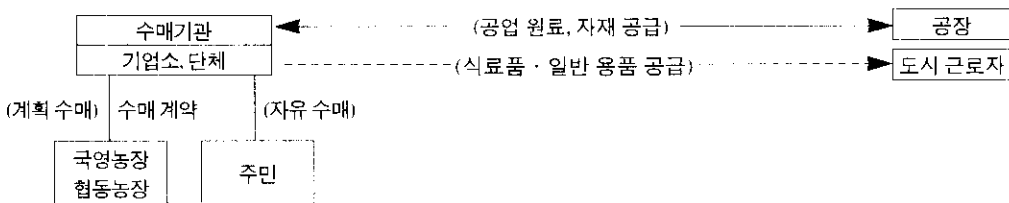
인적 소유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식료품 및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수매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수매는 “도시와 농촌, 농업 생산과 도시의 소비를 연결시켜, 주민들의 식료품 수요를 충족시키며 공업에 필요한 원료·자재를 조장하는 상업의 한 형태”⁷⁾이다.

수매에는 계획 수매와 자유 수매가 있다. 계획 수매는 계획적 계약으로서의 농업 생산물 수매 계약에 의한 것이며 의무 수매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유 수매는 국가 계획에 있는 농산물 이외의 농축산물과 농토산물, 원료와 자재, 일반 용품을 구매하는 일반 계약에 의한 것이다.

셋째, 사회 급양 사업은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며 여성들의 가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⁸⁾이다. 즉, 각종 음식을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북한의 상업 부문이다. 소위 밥공장, 국수공장, 빵공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식량난

(그림 3) 수매 사업의 체계



자료: 정재길, 앞의 글, p. 194.

7) 「사회주의상업법」, 제3장 30조.

이 가중되면서 원자재의 부족으로 사회 급양 시설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넷째, 편의 봉사 사업은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에 도움을 주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사업”⁸⁾이다. 이 사업을 위해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 기관은 위생 편의, 가공 편의, 수리 편의 및 理容 편의 같은 편의봉사망을 도시와 농촌에 설치하고 있다.

다섯째, 상품 보관 관리 사업은 “상품을 질량적으로 검수 선별하고 정확히 보관하며 상품의 손실을 없애고 품종 구색을 갖추어 인민들에게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⁹⁾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성에 맞게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며, 설비를 현대화해야 한다.¹⁰⁾

소유 형태별 사업 형태

소유 형태별 사업 형태는 크게 국영 상업, 협동단체 상업, 농민 시장 등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국영 상업은 전인민적 소유(국유)에 기초하고 있는 중앙 집권적인 사

회주의의 가장 높은 상업 형태이다. 여기서는 계획적으로 책정된 국정 가격에 의해 상품이 배제되고, 모든 상업 활동이 직접 중앙 당국에 의해 계획·통제되고 있다. 국영 상업의 기본 역할은 생산과 주민의 소비를 계획적으로 연계시켜, 도시와 농촌에서의 상업 낙후를 불식시키는 데 있다.

1948년 11월 국영 상업이 평양시 및 각 도에 창설된 이래, 현재 북한에서는 도매 상품 유통의 경우 모두 국영 상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매 상품 유통도 거의 대부분 국영 상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영 상업에는 상업부 산하 생산 기업소들의 직매상업체계와 비생산 기관들의 상업체계가 있다. 또 국영 상업은 기본적으로 상업부에 의해 통일적으로 지도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방 상업은 지방 행정 기관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다.¹²⁾

둘째, 협동단체 상업은 협동적 소유에 기초를 두고 국영 상업의 보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 협동단체 상업은 과도적 소유 형태로서 국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특정 집단이 상품 공급을 보충 또는 자체

8) 「사회주의상업법」, 제4장 41조.

9) 「사회주의상업법」, 제5장 50조.

10) 「사회주의상업법」, 제6장 57조.

11) 그러나 북한의 경우 현대화된 보관 설비가 굉장히 부족하여 특히 농업 생산물의 보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 북한연구소(1984), 「북한총람」, p. 652.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협동단체 상업 형태는 1964년 거의 모두 국영 상업으로 흡수·전환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생산협동조합과 수산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매 상점들 정도가 남아 있다.

셋째, 농민 시장은 1958년 8월 농촌 시장이 폐지되고 그대신 창설된 것으로, 농민들이 개인 부업으로 생산한 농축산물의 일부를 일정한 장소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장소이다. 농민 시장은 기본적으로 농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영 상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북한에서는 개인 부업에 의한 생산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농민 시장을 자본주의적 성격을 띤 가장 낙후된 상업 형태로 파악하고 있어, 개인 텃밭의 크기를 제한하여 농민 시장의 유통 규모를 일정 범위로 한정시키고 있다. 또 농민 시장에서는 쌀, 보리 등의 곡물류와 공산품에 대한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가격체계

상업 유통과 관련하여 가격체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북한에서의 가격은 자본주의에서처럼 시장에서의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계획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국가가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가 소매 상품에 대해 지불하는 소매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책정하고 있는 가격 형태에는 크게 도매 가격, 산업 도매 가격, 상업 기관 소매 가격, 수매 가격, 운임 및 요금 등이 있다.

첫째, 도매 가격은 상품 또는 상품적 형태를 지닌 생산 수단이 국가기업소간에 유통될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국가기업소간의 유통이란 기업소와 자재 공급 기관, 기업소와 기업소간의 유통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도매 가격은 생산 원가(생산에 지출된 비용, 감가상각비, 임금 및 행정 관리비)에 기업소의 순소득(이윤)을 합쳐 산출된다. 도매 가격의 결정은 정무원 가격제정위원회(가격제정총국), 도행정위원회의 등에서 계획적으로 결정된다.

둘째, 산업 도매 가격은 도매 가격에 간접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도매 수입금을 합친 것으로, 원목과 전력에 적용된다. 국영 농목장에서 생산되는 농업 생산물에 대해서도 산업 도매 가격이 적용된다.

셋째, 상업 기관 소매 가격은 도매 가격에 소매 수입금, 상점의 유통비(수송비, 인건비, 포장비) 및 이윤을 부가한 것으로, 개인 소비자가 상점에서 소비재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일반적으로 주민 생활에 필수적 제품과 학용품 등의 가격은 싸게 하고, 기호품 등 공급이 부족하든지 보급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제품의 가격은 높게 책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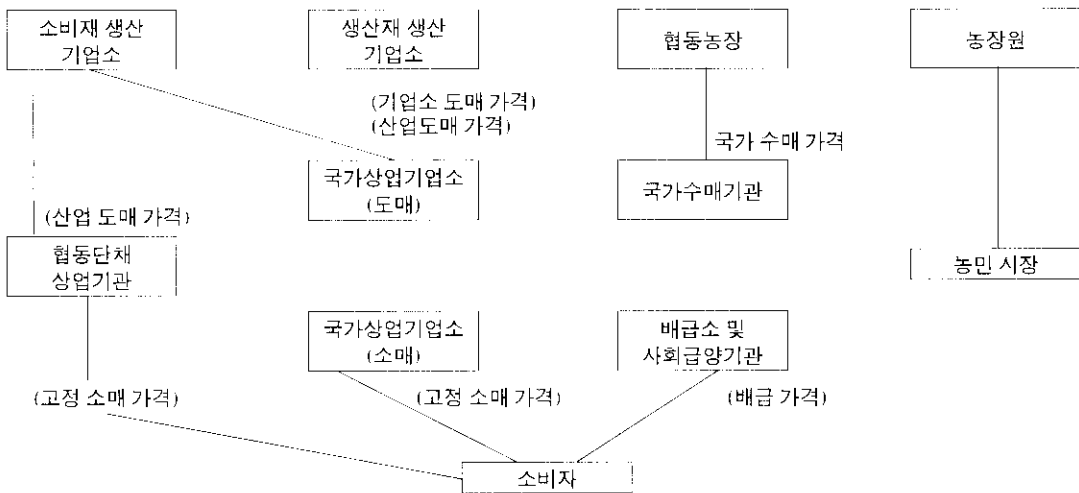
넷째, 구매 가격은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책정하는 가격으로, 계획 구매 가격과 자유 구매 가격으로 나뉘어진다. 계획 구매 가격은 국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제정되는 가격이며, 자유 구매 가격은 계획 구매 가격과 소매 가격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급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실제 구매 가격은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 농민들이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다섯째, 운임 및 요금이다. 운임은 수송

서비스에 대해 지불되는 대가로, 모든 운임은 생산물 가격과 같이 국가에 의해 통일적으로 결정된다. 운임은 일반적으로 원가와 이윤으로 구성되는데, 개인적 수요를 위한 운임은 소매 가격과 동일하게 원가, 이윤 및 거래 수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금은 각종 봉사 활동에 대해 기관·기업소 및 주민들이 지불하는 가격이다. 이는 전력, 우편, 통신 시설, 인프라, 인쇄 시설 이용, 수리 의뢰 등에 부과되며, 생산적 요금과 비생산적 요금으로 구분되어 있다. 생산적 요금은 원가와 이윤으로, 비생산적 요금은 원가와 이윤, 거래 수입금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4〉 유통가격체계



자료: 북한연구소(1994), 「북한총람」, p. 372.

비공식적 유통체계

90년대 들어 북한 경제가 침체되고, 동시에 식량난 등으로 기본적인 배급제가 붕괴 조짐을 보이게 되어, 비공식적인 시장의 규모가 점차 증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농민 시장에서 공식적인 거래가 아닌 금지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농민 시장은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축산물 등을 판매하기 위해 군별로 1~2 개씩 설치하여, 월 3 회 개장하게끔 한 것이다. 그러나 점차 거래가 활발해져 1993년에 들어서 10 일장이던 농민 시장을 1 일장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금지 품목에 대한 암거래가 성행하고 허용된 지역 이외에서도 시장이 개설되고 있는 등 암시장화되고 있다. 또한 물품 부족과 국영 상점의 기능 상실로 인해 국정 가격과 암시장 가격이라는 이중가격체계가 형성되어, 농민 시장에서 판매되는 품목의 가격은 국정 가격보다 80~100 배나 높다고 알려져 있다.¹³⁾

이와 같이 암시장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계획체제에 따른 생산 구조 모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생

산 수단의 국유화를 통한 계획경제체제 및 산업화를 위한 중공급 우선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식량과 생필품의 수급이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며, 이에 따라 경제가 더욱 마비되게 되어 기존의 계획적 상업체제가 전혀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의 상업 유통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비공식적인 암시장이 횡행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 상업유통체계의 모순과 해결

북한의 상업유통체계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와 결부시키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불완전한 계획 경제 하에서 공급자 위주의 제도적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생산물의 경우 소비자의 욕구와는 거리가 먼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업 정책에서도 공급제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으며, 부족한 소비품에 대해 배급제 등과 같은 할당제도를 취하여 주민들은 필요한 소비품들을 적기에 구입하기 힘들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상업유통체계 자체가 붕

13) 「내외통신」(1998. 2.26), 제1098호.

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상업유통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암시장이 발생하여 2중 가격이 형성되며, 이로 인해 기존의 가격·유통체계가 교란 상태에 빠지게 된다.

북한에서 이러한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사회주의적 계획화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기존의 사회주의관을 어느 정도 따르든 하더라도, 개혁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사회 이전의 과도적 형태라고 한다면, 이 사회에서 상품의 자본주의적 요소는 잠복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다.¹⁴⁾

북한이 어떤 사회로 이행해갈 것인가에 대해 전망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북한이 현 체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경제적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품의 존재를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¹⁵⁾ 이를 위해 북한은 체제를 가장 교란시키지 않는 부문에서부터 개혁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민들의 필수품인 농산물에 대한 개혁이 시도될 수 있다. 여기서

시사적인 것은 1997년 11월 24일 베트남에서 북한 농업위원회 정장시 국장이 농산물 가격 자유화, 소규모 농산물 시장 활성화, 단위 작업반에 대한 보너스제도 채택, 과학 영농 달성 등 4개 항목의 농업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농산물 시장 및 가격 자유화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이는 북한의 기존 태도에 비해 진일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농업 부문의 개혁을 토대로 개혁이 도시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의 상업유통체계의 모순은 북한 경제의 핵심인 계획화체계, 중공업 우선 정책 등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점진적 개혁을 통해 점차적으로 상업유통체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統

14) 여기서 적극적이라는 말은 존재하는 상품적 요소를 인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회적 모순을 해결한다는 의미이다.

15) 이에 대해 많은 시사를 주는 것은 중국의 경제 개혁일 것이다.